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김 소 영** · 이 형 주*** · 박 주 영**** · 최 상 아***** ·
성 보 경***** · 강 주 엽*****

논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다양한 변화 요인 중 한국 경제에 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변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한 향후 금융정책 방향을 완화, 적응, 혁신의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의 주요 변화 요인들과 그 영향을 조망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틀(framework)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상기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금융정책,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6, G1, G2, O2

투고 일자: 2024. 9. 19. 심사 및 수정 일자: 2025. 1. 12. 게재 확정 일자: 2025. 1. 24.

*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금융위원회 미래금융추진단 관계자들과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유익한 제안을 해 주신 미래대응금융TF에 감사드리며, 본 논문의 견해는 작성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소속기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 교신저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soyoungkim@snu.ac.kr

*** 공동저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e-mail: hyungju2@korea.kr

**** 공동저자,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e-mail: jypark2000@korea.kr

***** 공동저자, 금융위원회 서기관, e-mail: choisa@korea.kr

***** 공동저자, 금융위원회 서기관, e-mail: cerry85@korea.kr

***** 공동저자, 금융위원회 사무관, e-mail: justin0918@korea.kr

I. 서 론

그동안 금융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여, 단기적 대응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금융정책 논의 또한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중장기적인 변화는 금융시장·금융산업·금융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금융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경제성장을 하락 추세를 반전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며, 금융정책이 이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와 한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여, 중장기적인 금융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변화 중 대다수 국가가 당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이라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다.¹⁾ 이 세 가지 요인들은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금융 분야에도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융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들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크고, 금융정책을 활용하여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래의 주요 변화 요인과 영향을 조망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틀(framework)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중 개별 변화 요인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1)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미래의 구조 변화 관련한 연구들에서 주로 대상이 된 항목들이며, 상대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메가트렌드’라고 지칭하는데, Fitch는 6대 메가트렌드로 Digital transformation and disruptive technologie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ustainability and ESG, Labour·skills shortages and demographic shifts, Trade and globalization trends, Political and economic volatility를 선정하였고, PwC는 5대 메가트렌드로 Shift in global economic power, Demographic shifts, Accelerating urbanization, Rise of technology, Climate change and resource scarcity를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3가지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Shift in global economic power, trade and globalization trends, political and economic volatility, accelerating urbanization 등은 진행 방향이 상대적으로 더 불확실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들어, 한국은행 등(2017)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거시경제 영향 및 금융산업·대외투자·주택시장·노동시장 등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영도(2022)는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용근(2022)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이효섭(2024)은 생성형 AI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과 리스크 요인으로 구분하고, 혁신을 위한 규율체계 정비와 함께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는 한편, 오정주·이환수(2021)는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혁신의 금융 분야 적용 과정에서 기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미래의 변화 요인 각각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정책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각각의 요인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고, 완화, 적응, 혁신 세 가지 방향에서 금융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보다 더 풍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금융정책 당국이 주목해야 할 미래의 변화 요인들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각각의 변화가 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소비자에게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한 금융정책 방향을 완화, 적응, 혁신의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미래의 주요 변화 요인: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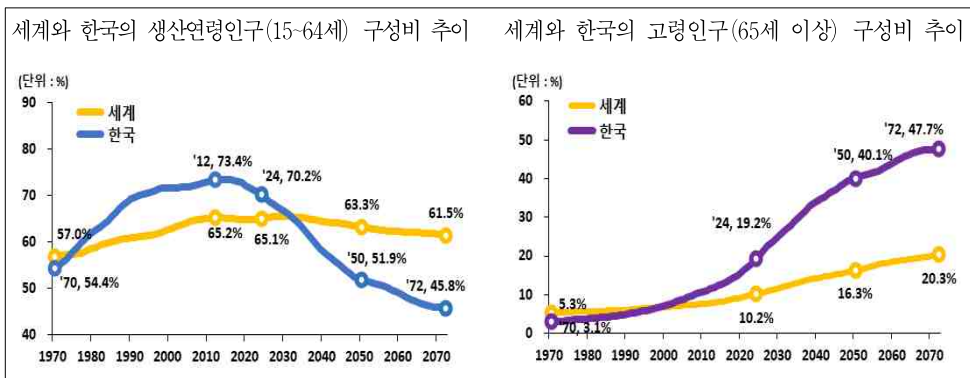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금융정책 방향을 검토하기에 앞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주요 변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 요인들은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직면한 변화로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세를 뒤집기 어려운 흐름이며,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경제와 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 가지 변화 요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구조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이 주된 모습이다.²⁾ 특히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명 연장 등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50년경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2022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1%) 할 것으로 예상³⁾되는데, 이는 전 세계 변화 추이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이 보다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는 경제성장 둔화, 부양비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 속도를 늦추는 한편,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거·복지·교육·지역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정책은 자산의 축적 및 활용과 관련한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incentive) 구조를 설계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자료: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통계청, 2024. 9월).






2)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32년 65.4%를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UN, 2024).

3) 2050년 생산연령인구(15~54세) 비중 51.9%로 추계(중위 추계 기준)(통계청, 2024).

2. 기후변화

기온 상승 및 이상기후 증가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과의 교역·투자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요구하는 등 기후 관련 규제가 무역 장벽화 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맞추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 주요국 탄소중립선언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 가	탄소중립 선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
 E U	'50년 목표	'90년 대비 55% 감축	유럽기후법
 미국	'50년 목표	'05년 대비 50-52% 감축	정책서
 영국	'50년 목표	'90년 대비 63% 감축	기후변화법
 일본	'50년 목표	'13년 대비 46% 감축	지구온난화대책법
 한국	'50년 목표	'18년 대비 40% 감축	탄소중립기본법

자료: UNFCCC.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파급경로와 충격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3. 기술혁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혁신이 금융 분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전달 체계와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면서, 산

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은 금융이 변화하고 있는 주요 모습이다. 솔로우 모형(R. Solow, 1954) 등 성장 이론에서 기술의 진보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듯이,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클라우드(cloud), 플랫폼(platform) 등과 같은 기술은 금융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효용을 증가시키는 등 금융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첨단 기술의 활용은 금융시장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 활용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주요 변화 요인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이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금융 분야에서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에 주목하였다. 기술혁신은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등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기술의 내재적 위험,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위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1.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1) 인구구조 변화 영향의 파급경로

인구구조 변화는 가계의 저축·부채 행태 변화 및 자산 구성 변화, 기업 자금조달, 정부 재정 지출 확대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가계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자산의 구성 변화가 예상된다. 생애주기이론(Life-Cycle Hypothesis)⁴⁾에 따르면, 개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장년기에 저축 등 금융자산을 축적하였다가 은퇴 이후 자산을 소진하면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

4) Modigliani and Brumberg(1954) 등.

쳐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가계 금융자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⁵⁾ 또한, 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구성 중 고유동성·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는 위험기피적 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계 금융자산 규모와 구성이 변화한 결과 주식 시장의 자금 유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계 부채 규모의 변화는 통상 주택 매입 등으로 중·장년층의 부채 보유 규모가 크다는 특성⁶⁾을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향후 가구 수 감소⁷⁾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수요는 둔화되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점차 약화되다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 수요의 감소는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상승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경제성장 둔화로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면 주식의 본원 가치가 감소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면서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국고채 발행 압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주식 시장은 가계와 기업의 위험자산 투자 위축과 기업의 수익성 하락 등으로 축소되는 한편, 채권 시장의 경우 안전 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국고채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고채 규모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로 인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김세완·김경록(2024)은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규모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 시가총액은 2035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며 2060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채권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이 2047년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후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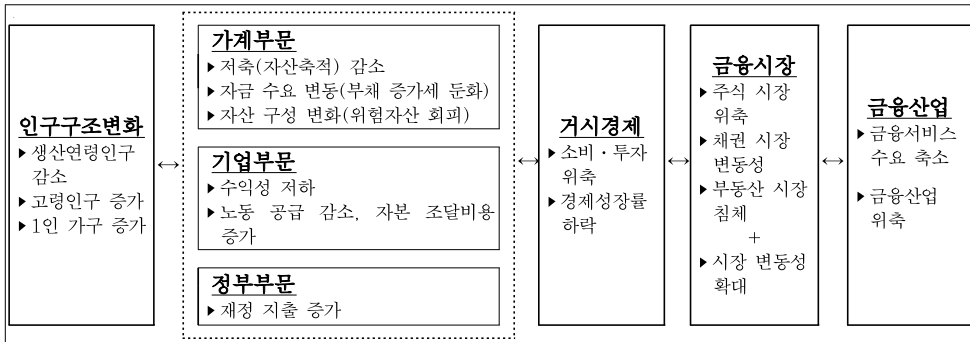
5) 고령화와 저축률 간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Deaton·Paxson, 1997)와 급격한 고령화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저축률을 상승시킨다는 주장(김경수·유경원, 2014)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은퇴 연령층의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6)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24. 12월).

- 연령대별 부채 보유액(천만 원): (39세 이하) 9.4, (40~49세) 13.1, (50~59세) 10.3, (60세 이상) 6.3.
- 부채 유형별 구성비(%): (담보대출) 57.8, (신용대출) 10.4, (기타금융부채) 4.6, (임대보증금) 27.3.

7) ‘장래가구추계’ 결과 2041년을 정점으로 전체 가구 수 감소 예상(통계청, 2024. 9월).

〈그림 2〉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파급경로(요약)



(2)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기회 요인

〈표 2〉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위기·기회 요인(예시)

위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 둔화, 저축 및 투자 감소 →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위축▶ 재정 지출 증가, 자본수익률 민감도 상승 → 금융시장 안정성 저하▶ 고령층 부양 부담 증가 →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증가
기회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금융서비스(자산관리·연금 등) 활성화▶ 금융회사의 연계 서비스(헬스케어, 요양 등) 진출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변경(부채(debt)→지분(equity)) 및 기업구조 개선 노력 확대

인구구조 변화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금융산업·금융소비자에게 위기 요인으로 인식된다.

먼저,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가계의 저축 및 금융자산 축적 규모가 줄어드는 한편,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 및 자금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익성, 건전성 등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시장으로 신규 자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금융회사 간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 이외의 수단(MMF, 금융채 등)을 활용하는 등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활동 인구의 감소로 대출·보험 등 금융 수요가 줄어들어 금융회사의 경영 실적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성장 둔화 영향으로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거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계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영향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고 보고되었다.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국민연금기금 감소⁹⁾ 등 불확실성 증가는 금융시장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22년 9월 발생한 영국 연기금 부채연계투자(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포트폴리오 청산 위기는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충격 요인(trigger)이 발생하면 금융시장 전체에 리스크가 파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⁰⁾ 한편, 인구구조 변화로 투자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기업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소득 및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자산을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유인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채권 등 전통적 자산이 충분한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시장 유동성과 잠재적 투자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유입되기보다는 위험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동하고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면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Iman and Schmieder(2024)는 은행들이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채 투자 확대, 신규 사업 분야 다각화, 해외 진출을 추구할 경우 새로운 꼬리 위험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BCG(2024)는 저성장이 예상되면서 개인이 자산 증식을 위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기술 발전으로 상품간 비교가 쉬워져 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대 수명 증가로 은퇴 후 소득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가 개별 금융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1위 수준¹¹⁾이라는 점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이 증가하고 금융자산 수익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사기 및 불완전판매 예방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8) IMF(2017), Long-term Challenges for Financial Intermediation,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Japan.

9)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당기 수지 적자 전환, 2056년 기금소진이 예상됨(보건복지부, 2024).

10) Ruo Chen·Esti Kemp(2023), Lessons from United Kingdoms Liability Driven Investment (LDI) Crisis.

11) 한국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65세 인구 비중)은 40.4%이며, OECD 평균(14.2%) 대비 약 3배로 1위(OECD, 2023).

있다.

먼저, 자산관리 서비스, 개인연금 등 미래 설계 상품, 고령층 맞춤형 신탁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2003년 이후 신탁 시장 규모가 연평균 6%씩 성장하여 2023년 기준 GDP 대비 신탁 자산의 규모가 한국의 5배에 가까운 수준이다.¹²⁾ 보험 등 금융서비스와 연계하여 헬스케어·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관련 산업에 투자·진출하는 등 금융산업의 확장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자산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고령 가구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 관련 자산에 치중된 상황¹³⁾에서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 및 기업이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자산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부채(debt)에서 지분(equity)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 규모 대비 높은 민간 부채 규모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구조 개선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 리스크의 파급경로

기후 리스크는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s)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소비자의 선호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s)로 구분된다. 이들 리스크는 가계 및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주는 실물경제 경로를 거쳐 금융시장·금융산업으로 파급된다.

12) 2023년 9월 기준 GDP 대비 신탁 규모(수탁고 기준)는 일본은 GDP 대비 267%에 달하는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57% 수준에 그친다(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4).

13)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구성 중 80.6%(전월세 보증금 2.9%, 거주주택 42.5%, 거주주택의 35.2%)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집계(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등(2024)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관리할 때보다 2100년 기준 GDP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¹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크 요인별로 구분하면, 탄소 저감 정책(전환 리스크)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고탄소 산업 부문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 충격이 발행할 수 있으나, 장기로 갈수록 기술 발전과 기후 피해 완화로 인한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도 상승 및 강수량 증가에 따른 피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물리적 리스크)는 자산가치 하락, 농산물 공급 충격 등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장기로 갈수록 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3〉 기후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파급경로(요약)

기후리스크	실물경제 파급 효과	금융 분야 영향
〈 물리적 리스크 〉 ▶ 급성리스크 태풍·홍수·빈도·규모 증가 ▶ 만성리스크 온도 상승, 강수량 변화 〈 전환 리스크 〉 ▶ 기후변화 대응 규제 → 탄소가격 상승 ▶ 친환경 기술 발전 ▶ 소비자 선호 변화	<div> 〈 기업부문 〉 ▶ 자산가치 하락, 자본지출 증가 ▶ 비용구조 변화, 수요 변화 ▶ 규제 대응 등 법적 비용 발생 </div> <div> 〈 거시경제 영향 〉 ▶ 생산자 물가 상승 ▶ 농산물 가격 상승 ▶ (노동·토지) 생산성 감소 ▶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 산업구조 변화 ▶ 노동시장 마찰 ▶ 국제 무역, 금리, 환율 충격 </div>	〈 신용리스크 〉 ▶ 담보가치 하락, 보험사고 증가 ▶ 대출손실을 증가 ▶ 리파이낸싱 리스크 확대 〈 시장리스크 〉 ▶ 채권·주식 가치 변동 ▶ 불확실성 증가 〈 운영리스크 〉 ▶ 평판 관리 ▶ 고탄소기업 포트폴리오 조정 ▶ 사업장 불교 등

자료: 한국은행 (2024), NGFS (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기회 요인

기후변화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이상기후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담보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는 등 금융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 고탄소 기업을 중심으로 부도율 증가 및 대출손실을 상승 등

14)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추정 결과, 무정책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1.8%, 2100년 -21%,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13.1%, 2100년 -10.2%로 추정 (한국은행 등, 2024).

〈표 3〉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위기·기회 요인(예시)

위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리스크) 담보 자산 가치 하락 및 보험사고 증가, 고탄소 기업 대출 손실을 상승 ▶ (시장리스크) 고탄소 기업의 발행 채권·주식 가치 변동,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 (운영리스크)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회사 평판 관리, 고탄소 기업 관련 포트폴리오 조정 등
기회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금융시장(녹색금융, 탄소배출권 시장 등)·금융산업 성장 ▶ 기후 기술 산업 등 신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투자 기회 확보

자산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후변화가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의 신용 손실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탄소 규제가 강화될수록 고탄소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주가 변동, 대출이자율 상승, 회사채 발행 스프레드 확대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등 금융시장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운영 측면에서 고탄소 기업에 대한 자산 및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압력, 기후변화 대응 금융상품 개발, 지속가능성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평판 관리 부담 등은 추가적인 위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시장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녹색채권·녹색여신 등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녹색자금 공급 확대(금융위원회), 녹색채권 이자 보전 사업(환경부) 등을 시행하고 있다¹⁵⁾. 또한, 환경부(2023)는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 및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연계대출, 녹색채권 환매조건부 거래, 기후재해 지수형 보험 등 새로운 기후금융 상품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기후 기술 산업 등 신산업 부문의 자금 수요 확대

15) 금융위원회·환경부(2024.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3)는 기후테크 분야에 2030년까지 14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동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3. 기술혁신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기술 변화 유형

기술혁신의 유형은 다양하고 변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수십년의 기간에 걸친 장기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최근 기술 변화의 양상을 고려하여 금융에 영향이 큰 유형(인공지능, 블록체인, 플랫폼, 클라우드)을 중심으로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4〉 금융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분야(예시)

인공지능	▶ 생성형AI의 활용은 금융회사 업무 전반(운영 및 개발, 리스크관리, 대고객서비스)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생산성·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블록체인	▶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비용 절감, 보안 강화 등의 장점으로 탈중앙화 금융(DeFi), 토큰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활용 가능
플랫폼	▶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연결하고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금융-비금융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주요 영역
클라우드	▶ 클라우드는 대량의 데이터를 낮은 비용에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 기반을 제공

(2) 기술혁신과 금융의 변화

금융은 기술혁신의 영향이 강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며, 기술의 확산으로 금융산업 구조 및 금융시장 참여자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빅테크 또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금융-비금융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폭넓은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금융 분야에 진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금융회사 내부 업무 프로세스 일부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부화되면서, 금융 관련 기술 기업(핀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회사와 다양한 방식의 협력관계를 구축(업무 위탁, 제휴 등)하면서 금융시장의 새로운 참여자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확산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확대로 금융회사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자동화 방식으로 변화하는 한편, 클라우드의 확산은 업무 프로세스를 단위별로 모듈화하여, 일부 업무 프로세스는 외부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핵심 업무 위주로 내부 업무시스템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금융회사는 변화에 유리한 유연한 조직 구조를 선호하게 되고, 인력 구조의 재편 등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혁신과 관련한 위기·기회 요인

〈표 5〉 기술혁신이 금융에 미치는 위기·기회 요인(예시)

위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시간장 상호연결성 및 집중화 확대에 의한 시장 위험▶ AI를 중심으로 한 확일성 발현 위험▶ 기술 자체의 불완전성(네트워크 성능 저하, 데이터 오염 등) 또는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
기회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서비스의 자동화 및 운영 비용 절감으로 금융회사 업무 효율성 확대▶ 금융서비스 비교 및 이동가능성 확대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소비자 효용 증대

기술 변화는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금융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면서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 또는 인프라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의존도가 높을 경우, 이는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이 되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관들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¹⁶⁾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또는 AI의 도움을 받은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유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확일성(uniformity)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또는 자기강화형(self-reinforcing) 시장 급등락을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

16) 예를 들어, 2024.7월 Microsoft사의 클라우드 오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의료·금융 등 다방면에서 전산망 마비 및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다. IMF (2024)는 AI 모델이 시장 충격 상황에서 유사하게 반응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기술 자체의 결함 또는 오작동,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 등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을 활용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한 네트워크 성능 저하 또는 소수의 우월한 권한을 보유한 자에 의한 해킹이나 거래 조작 등 보안사고 위험도 있다. AI를 활용한 알고리즘은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외부데이터 오염, 환각(hallucination)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 밖에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규제 또는 감독시스템과 현실과의 괴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 환경으로 금융 분야에서 기술 활용이 지연되거나, 새로운 기술 활용에 대한 규율이 미비한 상황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제기된다.

한편, 기술혁신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효용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술혁신은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AI를 활용한 자동화로 금융회사 업무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방식의 인프라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금융 체계보다 신속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안된다. IT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규제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레그테크(regtech) 분야의 성장¹⁷⁾으로 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여지도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소비자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비교가 용이해지고, 금융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경쟁 과정에서 서비스 향상 압력을 받고, 금융소비자는 낮은 비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2023. 12월)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도입(2023. 5. 31.)한 후,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총 2.3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하였으며, 총 이자절감액은 연 490억 원 수준이고,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금융회

17) 신경희(2023)는 레그테크와 관련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19년 53억 2,000만 달러에서 2027년 217억 3,000만 달러로 연평균 19.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가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양방향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현재보다 개인화되고 수준 높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IV.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정책 방향은 크게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혁신(Innovation)의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완화(Mitigation) 정책’은 금융정책을 활용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부정적 변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변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향이다. ‘적응(Adaptation) 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바뀌기 어려운 미래임을 받아들이고, 금융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 대응 방향이다. 끝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새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여 활용하는 전략인 ‘혁신(Innovation) 정책’을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대응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부정적 충격(shock) 요인으로 설명

〈그림 4〉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요약)

구분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위기 요인	금융시장·산업 위축 고령층 소득 흐름 우려	기후변화 대응 부담 증가 금융산업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기회 요인	지분 금융 활성화, 맞춤형 금융서비스 다양화	기후 관련 금융산업 성장, 새로운 투자 기회 확대	금융시장·산업 고도화 금융회사 업무 효율 제고
↓			
금융 정책 대응 방향	미래 변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및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완화〉 생산연령인구 증가에 기여, 고령사회 리스크 완화	〈완화〉 온실가스 감축분야 자금공 급	〈완화〉 디지털 사기, 소비자보호 대응 강화
	〈적응〉 자본시장 선진화,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적응〉 금융회사 기후 리스크 관리	〈적응〉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강화, 기존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보완 인프라 구축, 인력 변화에 대비
	〈혁신〉 맞춤형 금융서비스 활성화	〈혁신〉 신시장·신산업 성장 도모	〈혁신〉 신규 진입 촉진, 금융산업 확장

되는 인구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는 금융정책을 활용하여 변화의 흐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기술혁신의 경우 그 자체로 부정적 충격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의 충격이므로 금융정책을 활용해 변화의 흐름과 속도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술혁신 관련 금융정책은 적응 및 혁신 정책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되, 기술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대응을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색하였다.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며, 금융정책만으로 변화에 대응하거나 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약하에서도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를 늦추거나,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사회적 리스크를 완화(Mitigation)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또는 금융산업 위축 등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영향에 대한 금융의 적응(Adaptation)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혁신(Innovation) 전략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완화 정책

먼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및 육아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되, 다양한 정책 수단 간 상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그 간 가입 요건을 완화하거나 재정 매칭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주거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정책은 자금흐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재정·세제 등을 활용한 지원과 병행되어야 하며, 주거·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단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또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령층 인구의 자산 중 약 80%가 부동산 관련 자산인 점을 고려하여,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가입연령, 주택 가액 등)과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이 주택연금을 이용¹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필요한 고령층이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 등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추계 결과(보건복지부, 2024. 9월) 2041년부터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 노후 안전망의 역할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행(고용노동부, 2023. 7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시스템 도입(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4. 10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금 방식으로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적응 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와 금융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의 자본생산성이 하락하여 추가적인 성장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산성 향상, 국민의 자산 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금융위원회, 2024. 2월) 하고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적으로 자본투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저축계좌(ISA)를 확대하고, 기업이

18) 2023년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 수는 12.1만명(한국주택금융공사, 2024. 5월).

지분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등은 자본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계 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채의 규모 및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매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 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관계기관 합동, 2024)’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자산 수익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NBFI는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수준이 약하다는 점에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¹⁹⁾ 앞으로도 취약 부문은 상시적인 리스크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시장안정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혁신 정책

인구구조 변화로 신탁 서비스, 고령화 관련 보험 서비스 등 분야의 금융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탁업 혁신 방안’ 마련(금융위원회, 2022), ‘보험개혁회의’ 운영(금융위원회, 2024) 등을 통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탁 서비스의 경우 노후 대비 자산관리 수요 대응, 세대 간 부의 이전 등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탁 서비스와 의료·돌봄 등 전문서비스의 결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탁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한편, 보험 분야에서는 고령인구의 요양시설 및 재가(가정요양) 부담 증가로 요양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실손보험 표준안을 마련(금융위원회, 2024) 하는 한편, 의료저축계좌 등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회사

19) IMF(2024, October),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등.

업무, 부수·연관 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²⁰⁾ 금융회사의 연관 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2. 기후변화 대응

IEA(2023)는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필요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가 2022년 연간 1.6조 달러에서 2050년 연간 4.7조 달러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재원은 대부분 정책금융기관과 재정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저탄소 설비 투자 부문에 과거 5년간(2019~2023) 연평균 36.1조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7년간(2024~2030) 연평균 60조원(총 420조원)으로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발표하였다(금융위원회, 2024. 3월). 또한, 정부는 그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2021. 12월), 녹색채권 발행지침(2020. 12월), 녹색여신 관리지침(2024. 12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민간 부문의 녹색자금 공급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고 리스크가 큰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특성상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필요한 만큼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후리스크 측정 및 공시와 관련된 제도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보 비대칭성이 높다는 점도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자금 공급이 어려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부담을 완화(Mitigation)하는데 금융이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금융시장·산업이 적응(Adaptation)하는 한편,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혁신(Innovation)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완화 정책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기후 분야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서 민간 자본의 자발적인 유입이

20) 금융위원회(2022), ‘금융규제혁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5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 프로젝트 등에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표 6〉 참조),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설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 기술 육성에 2030년까지 9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국가들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책금융 공급을 전담하는 공적 그린뱅크(Green Bank)를 설립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Clean Finance Corporation, 영국의 UK Green Investment Bank, 독일의 KfW 등이 이에 해당한다.²¹⁾

〈표 6〉 기후 분야 정책금융 공급 현황 및 목표(2024~2030)

(단위: 조원)

	'19-'23 연평균	'24년 실적('24. 10말)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산업은행	14.2	17.2	19.2	18.4	19.7	21.1	23.1	25.7
기업은행	2.0	3.0	2.4	3.6	4.3	5.1	6.2	7.3
수출입은행	7.4	12.0	17.7	12.2	12.4	12.5	12.7	12.8
신용보증기금	8.3	11.1	9.6	12.0	13.0	14.1	15.3	16.6
기술보증기금	4.3	5.3	5.2	5.5	5.7	5.9	6.1	6.2
합 계	36.1	48.6	54.1	51.7	55.1	58.7	63.4	68.6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민간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 투자 및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 또는 정책금융만을 활용한 자금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나 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여신이 녹색 활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채권 발행 지침, ▲녹색여신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 기업의 이차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여 정부 재정을 지원(2024년 예산 기준 76.8억원)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21) Geddes et al. (2018), The multiple roles of state investment banks in low-carbon energy finance.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민간 금융회사의 녹색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축소하여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중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고, 배출권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거래 방식 도입,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적응 정책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거시경제 및 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은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변화 전망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따른 대출 및 투자 손실 등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기후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²²⁾

또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 공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기구(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및 EU·미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탄소 배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공개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행태를 유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이다. 한국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 초안을 마련(금융위원회, 2024. 4월)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공급시 해당 기업의 활동이 녹색 경제활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 환경 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 협업 확

22) 금융감독원·한국은행(2024. 3월),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

대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3) 혁신 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기후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금융의 기반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일부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기후금융 상품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경쟁 우위로 삼아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기후 관련 컨설팅 등 연관 분야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BNP Paribas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 대출(대출을 제공한 기업이 기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함) 상품의 신디케이트론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해당 기업의 기후 목표 설정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²³⁾ 한편, AXA 그룹은 기후변화 전담 자회사(AXA Climate)를 설립하여 재해 관련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강수량 등 지표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면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재해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을 개발하여 기후금융의 선도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²⁴⁾

아울러,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 통화청 등은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 프로젝트’(Project Evergreen)를 시범 시행하였다.²⁵⁾ 녹색채권은 녹색 경제 활동에만 발행·사용되어야 하므로 발행 절차가 복잡하고 검증이 번거롭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증권 토큰(채권 발행)과 결제 토큰(투자자 청약)을 활용하여 채권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이 활용되는 프로젝트의 적합성 검토와 사후 보고 등 절차를 자동화하여 검증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관련 프로젝트가 실험 단계에 있으며, 녹색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기술혁신 대응

기술혁신은 금융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및 금융회사의 운영

23) www.bnpparibas.co.kr.

24) [climate.axa](https://climate.axa.com).

25) 한국은행 (2024), 토큰증권 (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2018년 금융혁신기획단 출범, 2024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개편)하여 핀테크 기업 육성 및 금융권의 AI·데이터 활용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기술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회사 대비 클라우드·AI·블록체인 등 기술 활용 정도는 낮은 편이다. McKinsey(2022)는 금융회사 응답자의 약 50%가 하나 이상의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프론트(front), 미들(middle), 백(back) 오피스의 모든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형 회사를 중심으로 고객 응대 등 단순 업무 또는 초기 단계의 이상거래탐지 등의 분야에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금융권의 기술 활용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엄격한 망분리 규제, 양질의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AI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²⁶⁾ 한편, 기술혁신의 금융 분야 도입은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리스크가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의 악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사기 대응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방향을 완화(Mitigation) 전략으로 제안하고, 기술혁신의 금융 분야 활용을 촉진하고 금융이 변화하는 모습에 적응(Adaptation)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금융산업의 도약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Innovation) 전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완화 정책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허위 조작 콘텐츠가 각종 사기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기 수법이 정교해지고 급격하게 확산하는 등 신종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공공·인증 분야의 정보가 모바일 단말에 집중되고 있는 환경(mobile all-in-one)이 심화하는 현상은 모바일 활용과 관련하여 보안 강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²⁷⁾ 이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신종 금융사기 탐지·적발, 보안 및 소비자 보호 관련 투자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

26) 금융위원회(2024. 3월), 금융권 AI 협의회 운영 방안.

27) 금융보안원(2024), 2025년 디지털금융 및 사이버보안 이슈 전망.

금융소비자들이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주의보·경보 등 전파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적응 정책

기술 활용으로 금융시장 참여자가 확대되고 상호연결성이 증가하면서 예측지 못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의 대상·범위를 재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응한 충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 (2024)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필수 IT 인프라 제공 업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율이 적용되었던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의 금융당국 보고 사항을 강화하고, 비금융기관(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시스템 리스크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긴급 유동성 지원 등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AI·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금융 분야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은 그 변화의 내용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 분야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정책 목표가 대립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정부는 그간 새로운 분야의 규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율 규제 및 가이드라인과 같은 유연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금융시장과 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제화하는 등 강력한 방식을 채택해 왔다. 예를 들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2025년 중 개정)을 통해 원칙 중심의 규율을 적용하는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2024. 8월)으로 이용자 보호 관련 필수 사항 중심의 법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기술혁신의 내용과 발전 속도에 기존 규제 체계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혁신이 저해되거나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 규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생성형 AI의 활용 및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금융위원회, 2024. 8월)하고, 기존의 엄격한 망분리(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 보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표 7〉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1단계('24년 연내 추진)	2단계	3단계															
① 생성형 AI 허용 (샌드박스) : 생성형 AI를 활용, 가명 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허용	④ 규제특례 정규 제도화 : 샌드박스로 성과 검증 → 규정 개정 등 추진	⑦ 「디지털 금융보안법(가칭)」 제정 ▶ 자율보안-결과 책임의 보안체계 구축 : 목표·원칙중심으로 규제 전환 ▶ 금융권 책임 강화 :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는 과징금 등 : CISO 권한 확대 및 CEO·이사회 보고의무 ▶ 금융당국의 점검·이행명령 등 금융권 보안수준 제고 뒷받침															
② 클라우드 이용 확대 (샌드박스) <table><tr><th></th><th>현행</th><th>개선</th></tr><tr><td>데이터</td><td>개인신용정보 금지</td><td>가명정보 허용</td></tr><tr><td>프로그램</td><td>협업툴, 인사관리 등</td><td>고객관리(CRM), 업무자동화 등 허용</td></tr><tr><td>유형</td><td>비중요업무 허용</td><td>업무자동화 등 허용</td></tr><tr><td>단말기</td><td>유선 PC만 허용</td><td>모바일단말 허용</td></tr></table>		현행	개선	데이터	개인신용정보 금지	가명정보 허용	프로그램	협업툴, 인사관리 등	고객관리(CRM), 업무자동화 등 허용	유형	비중요업무 허용	업무자동화 등 허용	단말기	유선 PC만 허용	모바일단말 허용	⑤ 규제특례 확대·고도화 :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 리스크가 높은 업무 → 강화된 보안대책을 전제로 추가 허용	
	현행	개선															
데이터	개인신용정보 금지	가명정보 허용															
프로그램	협업툴, 인사관리 등	고객관리(CRM), 업무자동화 등 허용															
유형	비중요업무 허용	업무자동화 등 허용															
단말기	유선 PC만 허용	모바일단말 허용															
③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 (감독규정 개정) <table><tr><th></th><th>현행</th><th>개선</th></tr><tr><td>연구·개발망/업무망 간</td><td>물리적 망분리</td><td>논리적 망분리</td></tr><tr><td>연구·개발망/전산실 간</td><td></td><td>개발 결과물 이관 등 예외 허용</td></tr><tr><td>데이터</td><td>개인신용정보 금지</td><td>가명정보 허용</td></tr></table>		현행	개선	연구·개발망/업무망 간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연구·개발망/전산실 간		개발 결과물 이관 등 예외 허용	데이터	개인신용정보 금지	가명정보 허용	⑥ 제3자 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한 정보처리 위탁제도 정비				
	현행	개선															
연구·개발망/업무망 간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연구·개발망/전산실 간		개발 결과물 이관 등 예외 허용															
데이터	개인신용정보 금지	가명정보 허용															

자료: 금융위원회.

기술혁신의 금융권 활용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 단위에서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AI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픈소스 AI 모델 선별·제공, 금융권 특화 데이터 구축 등을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방안’을 발표(2024. 12월)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최근 국내 시중은행 등과 공동으로 정부 바우처 사업에 예금토큰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²⁸⁾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은 금융회사 업무 수행 방식을 자동화·외주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인력 구조조정 이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은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갖추고, 기존 인력을 재교육·재배치하거나 신규 기술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2024. 1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 혁신 정책

먼저,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특화형 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원활한 금융업 진입을 위해 금융업 인허가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간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률이 부여한 영업대상, 영업규모, 영업방식 등을 일부 제한하고, 기존의 금융업의 인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지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기존 은행 대비 1/4의 자본금 요건),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최소 자본금 5억원) 등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아울러, 기술 확보를 위한 금융회사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술 기업과의 제휴 또는 협업을 촉진하는 방안은 기술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기술 인력을 채용하여 운용하는 방식과 함께 기술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은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술 확보 전략이다. 국내 법체계에서 금융회사가 타 산업 분야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 등은 제약이 있으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마련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등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술 기업의 범위와 출자 허용 지분을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추어 확대하는 한편,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금융회사들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 또는 국내 금융회사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금융인프라 수출 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모듈화하는 BaaS(Banking as a Service)와 같은 인프라는 금융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로 제안된다. 향후, 금융 인프라, 금융 제도, 금융시스템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미래의 다양한 변화 요인 중 한국 경제에 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세 가지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금융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와 관련된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기회 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완화, 적응, 혁신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미래의 변화 요인들과 그 영향을 조망하고, 중장기적인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변화 요인들은 모두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장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변화 요인들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 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금융 정책 방향 중 일부 내용은 이미 제도화되어 시행 중인 사항도 있으나, 학계 및 금융 관련 업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에 관하여 추가적인 연구와 함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는 디폴트옵션 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2023. 7. 19.
2.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 실물이전서비스 개시,” 2024. 10. 1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보도자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 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4. 11. 6.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2023. 8. 29.
5.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보도자료, “국내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 2024. 3. 27.
6. 금융보안원, “2025 디지털금융 및 사이버보안 이슈 전망,” 2024. 11. 15.
7. 금융위원회·환경부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2024. 3. 19.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2022. 8. 23.
9. _____, “종합재산관리 및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업 혁신방안,” 2022. 10. 13.
10. _____,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 2023. 12. 12.
11. _____,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4. 2. 26.
12. _____, “AI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한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 2024. 3. 28.
13. _____,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 개최,” 2024. 9. 19.
14. _____,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2024. 9. 26.
15. _____, “금융권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 12. 12.
1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 7. 8.
17. 김경수·유경원, “고령화가 가계부문 금융행태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패널을 이용한 분석,” 「KIF Working Paper」, 제9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

18. 김세완 · 김경록, “저성장 · 노령화와 국민경제 구조 변화,” 『한국금융학회 2024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 2024. 6. 14.
19. 김영도, “고령화에 대비한 신탁의 역할 강화와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금융 브리프』, 제31권 제 25호, 한국금융연구원, 2022.
20. 김재운 · 류기봉 · 황재학 · 김현진 · 김한나 · 이한아 · 심성보,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BOK 이슈노트』, 제2024-30호, 한국은행, 2024.
21. 배정민 · 남명훈, “토큰증권 (Security Token Offering) 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2024-29호, 한국은행, 2024.
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연금개혁 추진계획,” 2024. 9. 4.
23. 신경희, “금융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레그테크(RegTech),” 『자본시장포커스』, 제2020-20호, 자본시장연구원, 2020.
24. 오정주 · 이환수, “디지털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제21권 제5호, 한국융합보안학회, 2021.
25.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2024.
26. 이효섭,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금융산업 지형변화 및 대응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제2024-13호, 자본시장연구원, 2024.
27. 최용근,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급결제학회지』, Vol. 14, No. 2,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28.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보도자료,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2023. 6. 22.
29.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 12. 14.
30. _____, “장래가구추계 전국편 (2022-2052),” 2024. 9. 12.
31. _____,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2024. 9. 23.
32. _____,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4. 12. 9.
33. 환경부 보도자료,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2023. 9. 20.
34. 한국은행,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BOK 이슈노트』, 2017. 9.
35.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이용현황, www.hf.go.kr/ko/sub03/sub03_01_04.do
36. Angus Deaton, and Christina Paxson, “The Effects of Economic and Population Growth on National Saving and Inequality,” *Demography*, Vol. 34, No. 1, 1997.
37. Anna Geddes, Tobias S. Schmidt, and Bjarne Steffen, “The Multiple Roles of State Investment Banks in Low-carbon Energy Finance: An Analysis of Australia, the UK and Germany,” *Energy Policy*, vol. 115, 2018.
38. BCG, “인구변화와 금융산업,” 2024.
39. Franco Modigliani and Richard Brumberg,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Post-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54.
40. <https://climate.oxa/>
41. <https://unfccc.int/documents>
42. <https://www.bnpparibas.co.kr/ko/our-solutions/sustainable-finance/>
43. IEA, “Net Zero Roadmap: A Global Pathway to Keep the 1.5°C Goal in Reach,” 2023.
44. Imam Patrick. A and Christian Schmieder, *Aging Gracefully: Steering the Banking Sector*

- through Demographic Shifts, *IMF Working Paper*, No. 24/118, 2024.
45. IMF, "Long-term Challenges for Financial Intermediation,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Japan," *IMF Country Report*, No. 17/283, 2017.
46.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4. October)," 2024.
47. McKinsey, "Global AI Survey," 2022.
48. NGFS, "NGFS Scenarios for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2022.
49.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2023.
50. Robert M. Solow,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0, No. 1, 1956.
51. Ruo Chen and Esti Kemp, "Lessons from United Kingdoms Liability Driven Investment (LDI) Crisis," *IMF Selected Issues Paper*, No. 2023/049, 2023.
52.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2024.

Financial Policy Framework for Future Trends: Policy Responses to Demographic Shifts, Climate Chan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oyoung Kim* · Hyung Ju Lee** · Juyoung Park*** ·
Sang-ah Choi**** · Bokyoung Sung***** · Jooyup Kang*****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financial effects of and financial policy responses to demographic shifts, climate chan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s the key factors among the various future changes that are expected to be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the Korean economy. By overcoming risks and exploiting opportunities related to these three transforming trends, the study proposes strategic policy dir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dimensions - mitigation, adaptation, and innovation. The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future change factors and outlines the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long-term financial policy.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 and research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put measures and policies drawn by these policy directions into practice.

Key Words: financial policy, demographic change, climate change, technological innovation

JEL Classification: E6, G1, G2, O2

Received: Sept. 19, 2024. Revised: Jan. 12, 2025. Accepted: Jan. 24, 2025.

* Corresponding Author, Vice Chairm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9, Sejong-daero, Sejongno, Jongno-gu, Seoul, 03171, Korea, Phone: +82-2-2100-2800, e-mail: soyoungkim@snu.ac.kr

** Co-Author, Standing Commissione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9, Sejong-daero, Sejongno, Jongno-gu, Seoul, 03171, Korea, Phone: +82-2-2100-2701, e-mail: hyungju2@korea.kr

*** Co-Author, Director General,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9, Sejong-daero, Sejongno, Jongno-gu, Seoul, 03171, Korea, Phone: +82-2-2100-2740, e-mail: jypark2000@korea.kr

**** Co-Author, Directo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9, Sejong-daero, Sejongno, Jongno-gu, Seoul, 03171, Korea, Phone: +82-2-2100-2501, e-mail: choisa@korea.kr

***** Co-Author, Director, Planning Future Finance Strategy T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9, Sejong-daero, Sejongno, Jongno-gu, Seoul, 03171, Korea, Phone: +82-2-2100-2501, e-mail: cerry85@korea.kr

***** Co-Author, Deputy Director, Planning Future Finance Strategy T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9, Sejong-daero, Sejongno, Jongno-gu, Seoul, 03171, Korea, Phone: +82-2-2100-1653, e-mail: justin0918@korea.kr